

현 공항 활용가능성 놓고 충돌

제2공항 쟁점해소 2차 토론 찬성측 “장래 수요처리 한계” 반대측 “첨단화 등으로 충분” ADPI 권고안 놓고도 대립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 ‘기존공항 활용 가능성’ 쟁점을 두고 입장차는 여전했다. 안전 확보와 장래 수요 처리를 위해 현 공항 확충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국토부측(찬성측) 주장과 관제·운영시스템 첨단화와 보조활주로 활용 등 개선을 통한 현 공항 확충으로 충분하다는 시민단체측(반대측)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또 ADPI(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권고안의 적용 가능성 및 효과를 두고도 의견이 갈렸다.

9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주 제2공항 관련 쟁점해소 2차 공개연속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찬성측인 국토교통부에서 김태병 공항행정정책과

장기수(4500만)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는 ADPI 연구결과가 제시됐으며, 국토부가 활주로 시설을 개선했지만 공항 수용력이 늘지 않은 것은 핵심적인 요건인 관제개선을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측은 ADPI 권고안 19개 개선방안 중 15개를 추진 중이며, 고속탈출유도로 증설, 이륙대기구역 신설 등 일부를 완료했지만 용량증대 효과는 미미하다고 밝혔다. ADPI가 보조활주로 연장 없이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안전을 위해 보조활주로 연장 및 확폭, 항행안전시설 설치 등이 필요하며 대규모 해양매립, 소음피해 증가 등이 우려됨도 밝혔다.

반면 비상도민회의측은 “보조활주로를 적극 활용하면 수용력 증대뿐만 아니라 안전과 소음 개선도 가능하다”면서 “ADPI 보고서가 현실에 옮기기에 구체성이 부족하다면 제주공항 수용력 증대 가능성과 개선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달라고 의뢰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현 공항 개선으로 장기수요(4500만)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는 ADPI 연구결과가 제시됐으며, 국토부가 활주로 시설을 개선했지만 공항 수용력이 늘지 않은 것은 핵심적인 요건인 관제개선을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측은 ADPI 권고안 19개 개선방안 중 15개를 추진 중이며, 고속탈출유도로 증설, 이륙대기구역 신설 등 일부를 완료했지만 용량증대 효과는 미미하다고 밝혔다. ADPI가 보조활주로 연장 없이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안전을 위해 보조활주로 연장 및 확폭, 항행안전시설 설치 등이 필요하며 대규모 해양매립, 소음피해 증가 등이 우려됨도 밝혔다.

반면 비상도민회의측은 “보조활주로를 적극 활용하면 수용력 증대뿐만 아니라 안전과 소음 개선도 가능하다”면서 “ADPI 보고서가 현실에 옮기기에 구체성이 부족하다면 제주공항 수용력 증대 가능성과 개선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달라고 의뢰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 참석자들이 개막식에서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일보 제공

“지방의회·행정 소통·신뢰의 장 되길”

제2회 대한민국 의회·행정박람회 부산 벡스코서 개막 한라일보 등 공동주최... 제주도·도의회 전시부스 운영

2020 제2회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가 9일 부산 벡스코에서 ‘지방의회의 가치를 드높이고 지방행정의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지방분권시대를 열다’라는 주제로 개막, 사흘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박람회는 민선7기 2주년을 맞아 국가와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공유하고, 지방의회와 지방행정 간에 상호 신뢰와 소통,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간에 활동을 홍보하고 의회 및 행정기관과의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용곤 한라일보 대표이사를 비롯 공동주최 언론사

대표들과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 조직위원 및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등 참가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박람회에서 제주도·제주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의 행정 및 의정활동을 한눈에 관찰할 수 있는 250여개의 전시부스가 운영된다.

특히 제주도는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정책 사업내용 및 주요성과, 세계중요농업유산 제주밭담, 제주해녀, 탄소없는 섬 제주 2030, 제주형 교통수요관리 정책, 전국 최초 재활용품요일별 배출제 시행 등 제주의 선도

분야를 홍보할 계획이다. 제주도의회는 지속가능발전 제주국제컨퍼런스, 제주 정책박람회, 민생탐방 등의 추진 과정과 성과 등에 대한 홍보와 전국 광역시·도 등과 의정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의 우수성을 알리는 부스를 운영, 다양한 이벤트도 제공하고 있다. 박람회 기간 선거·의정활동, 지방분권과 자치를 주제로 한 다양한 특강과 세미나도 마련된다.

9일에는 ▷자치분권이 도시 브랜드를 깨운다 ▷자치분권 시대, 지방정부의 구성과 기능 ▷공공혁신 WHY HOW 할 것인가 등의 특강이 마련됐다.

부산=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제주도 ‘녹색제품’ 구매 외면하나

지난해 구매율 29.4% 기록 2018년 45.8%에 견줘 ‘뚝’ 2013년엔 전국 도단위 1위 친환경 제품 구매 개선 요구

녹색제품 구매 우수기관이던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난해 녹색제품 구매율이 전년 대비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양 행정시에 비해서도 구매율이 낮아 친환경 제품 구매 제고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현행 ‘녹색

제품 구매법’은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사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8년 연간 녹색 제품 구매 금액은 3조3100억원 규모로 전체 공공기관 구매액의 50.3%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도의 녹색제품 구매 실적은 총 구매액 387억2800만원 가운데 112억9900만원으로 구매율은 29.4%다. 이는 전국 5위(전국 평균 39.1%)를 기록한 2018년 구매율 45.8%에 견줘 16.4%p 낮아진 수치다.

지난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구매율은 각각 33.1%와 36.3%로 도 보다는 높다. 제주시는 지난해 총 구매액

365억4200만원중 119억8200만원을 녹색제품 구매에 사용했다. 서귀포시는 총 구매액 257억3000만원 가운데 녹색제품을 사는데 92억9300만원을 지출했다.

도의 지난해 전체 녹색제품 구매율은 32.5%로 2018년 36.2%와 2017년 33.3%에 견줘 낮은 상황이다.

앞서 도는 2013년 녹색제품 구매율은 32.5%를 기록하며 전국 도단위 1위를 차지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우수기관에 선정된 이후, 타지역 공공기관에서의 녹색제품 구매는 늘고 있으나 제주는 최근 몇년간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백금타기자 haru@ihalla.com

제주도내 공공도서관 열람실 제한 개방 ‘유보’

오는 14일 예정된 제주도내 공공도서관 열람실 ‘제한적 개방’이 유보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4일 좌석 50% 이하 수준으로 개방할 예정이었던 도내 6개 공공도서관(제주·한수물·동녘·서귀포·송악·제남) 열람실 개방을 유보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주도가 지난달 30일 도내 공공시설 개방 확대를 전면

유보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6개 공공도서관은 지난달 25일 도서관 대출과 반납을 위한 자료실을 개방 운영했고, 오는 14일부터는 열람실(좌석 50% 이하) 개방 및 20인 이하 참여 교육 및 행사 재개를 계획한 바 있다. 열람실과 마찬가지로 20인 이하 교육 및 행사도 전면 유보됐다. 또 공공도서관과 함께 부분적 개

을 시행한 제주교육박물관도 교육과 단체 행사 진행을 유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도서관 및 교육박물관은 휴관일을 제외한 주중 또는 주말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출입시에는 마스크 착용, 발열 검사, 손 소독 실시, 출입명부 작성 등을 해야한다. 송은범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축축 CONGRATULATIONS

제27회 한라환경대상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대상 수상

제주특별자치도·한라일보사 공동주최

제27회 한라환경대상 시상식

일시: 2020년 7월 10일 (월) | 장소: 한라일보 3층 대회의실 | 후원: 환경부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회장 강창익 외 이사일동
 자문위원장 한성울 외 위원일동
 사무국장 오남선 외 직원일동